

정부·검·경, 학동 건물 붕괴사고 조사 본격화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 구성...위법사항 확인엔 엄중 조치

현대산업개발·철거업체·감리회사 압수수색...인·허가과정도 조사

정부가 검·경이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 건물 붕괴 사고'에 대한 조사를 본격화했다.

국토교통부는 17명의 사상자를 낸 건물 붕괴 사고 조사를 위해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고 10일 밝혔다. 대형 사고의 경우 국토부 장관이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직접 사고 원인 등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위원회는 광주 사고 현장에서 안전 규정이 소홀해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닌지 조사해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해당 건물은 건축물관리법상 해체 허가 대상으로, 동구에 안전계획이 포함된 해체계획서를 제출해, 허가를 받고 해체 작업을 할 수 있다. 동구는 이 같은 해체계획서를 바탕으로 계획과 다른 철거가 이뤄진 점에 주목, 사법당국에 고발을 진행중이다. 경찰도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현대산업개발 광주 사무소, 철거업체 2곳, 감리회사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수사 부장이 본부장을 맡는 수사본부를 꾸리고 철거현장

관계자 10명에 대한 진술 취조를 시작으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 업무상 과실 등 위법 사항을 살펴보고 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학동 재개발사업 인·허가 등 사업 추진 전반적인 사항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경찰은 이날 오후 2시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으로 현장 감식을 진행했다.

경찰도 나섰다. 광주지검은 이번 사고를 검사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 중 '대형 화재·붕괴·폭발사고 등 관련범죄'로 보고 형사 3부를 반장으로 수사협력반을 편성, 현장 감중에 참여하는 등 사고원인 및 진상 규명을 위해 경찰과 협조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11일 오전 10시 광주경찰청에서 수사 상황 관련, 중간 브리핑을 진행한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사상자 17명이 발생한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10일 오후 광주 동구 학동 4구역 재개발사업 공사사인 현대산업개발의 현장사무소에서 압수품을 챙겨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시공사 대표·인허가 공무원·감리자 등 관련자 전원 구속수사하라”

광주경찰청 성명...광주교사노조 “고액 손해배상 부과 제도 마련해야”

광주 시민단체가 17명의 사상자를 낸 학동 재개발 현장 철거 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공사 대표·인허가 공무원·감리자·조합 등 관련자 전원을 구속 수사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0일 '학동 재개발 철거건물 붕괴 참사 관계자 전원 구속 수사 해야'라는 성명을 내고 이같이 주장했다.

광주경찰청은 “이번 참사도 역시나 철거 관련 절차 및 규정 미준수, 감리 부재 등에 따른 인재로 의심된다”며 “재개발 사업에 관련된 원청(현대산업개발) 대표, 인허가 공무원, 감리단장, 재개발조합, 하청업체 사장 등에 대한 전원 구속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보도에 따르면 감리는 건축주인 재개발

조합과 '비상주 감리' 계약을 맺어 철거현장에는 감리가 아예 없었다”며 “비상주 감리방식으로 현장에서의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규정과 절차들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어떻게 관리감독해 왔는지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하청업체인 철거업체의 불법 하도급 여부도 수사해야 한다”며 “재개발사업을 인허가해주는 관할구청 공무원과 건축주의 책임도 간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광주경찰청은 “특히 공무원은 안전사고와 부실시공 방지를 책임져야 하는 막중한 공적 임무를 부여받은 역할을 감리 담당자에게 맡겨놓고도 건축주와의 '비상주 감리' 계약을 허용했다”며 “건축주인 조합과 공사사인 현대산업개발 등과의 유착 관계는

없는지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정부와 국회를 향해서는 반복되는 건설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불법 다단계 하도급 근절, 비상주 감리제도의 개선, 감리의 독립성 보장 등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 시민단체 참여자 21도 성명을 내어 시공사 등 책임자 전원 구속을 촉구하면서 “관리를 소홀히 한 주무관청의 책임 등을 조사한 뒤 불법이 드러나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교사노동조합도 성명을 내고 “학동 재개발 현장 붕괴사고가 후진국형 사고의 마지막이 되어야 한다”며 철저한 원인 규명을 촉구했다. 교사노조는 처벌의 성격은 먼 ‘고액 손해배상 부과’를 포함한 법제도 마련으로 같은 사고가 반복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김형호 기자 khh@

전남도, 코로나 백신 접종 전국 첫 30% 돌파

105일만에 55만명 1차 접종...3분기까지 81% 접종 계획

전남도는 10일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 105일 만에 전남지역 백신 1차 접종자가 30%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이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도민 185만명 가운데 55만 명이 1차 예방접종을 완료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2차 접종까지 마친 누적 인원은 지난 4월 1일 첫 접종이 시작된 지 71일 만에 15만8000명을 넘어섰다.

전남지역이 다른 시도보다 접종 속도가 빠른 것은 전국에서 가장 발빠르게 전 시군 지역접종센터(22개소)를 일제 개소하고 보건소와 읍면동 주민센터·민간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접종을 독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어르신 이동편의를 위해 셔틀 버스를 제공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이 도움을 줬다.

또한 6월부터 백신 접종자에게 모임 인원 제한 제외, 경로당·복지관 등 복지시설 이용 허용, 농산

물 온라인 쇼핑물 ‘남도장터’ 30% 할인 등 일상회복을 위한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 것도 도민의 접종 참여율 상승에 한몫 했다고 전남도는 분석했다.

여수에 있는 요양병원 14명과 순천에서 3대 일가족 6명이 확진됐는데도 백신 접종을 완료한 의료진과 70대 어르신만 감염되지 않은 사례가 알려진 것도 한 원인으로 꼽힌다. 이와함께 사전예약을 못했더라도 접종을 희망하는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잔여백신 접종이 가능해지면서 접종 수요가 늘었다. 이날까지 잔여백신 접종자는 1227명으로 30대 346명, 40대 613명, 50대 246명, 60대 이상이 4명이다. 지난달부터 운영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콜센터도 백신 접종에 대한 도민의 궁금증 해소와 백신접종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다.

전남도는 10일부터 위탁의료기관 355개소에서 사전예약을 완료한 예비군과 민방위 대원 2만4536명을 대상으로 양산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 14일부

터는 여수·완도·진도 3개 시군 27개 도서의 30세 이상 638명에 대한 예방접종도 해군 한산도함에서 시작할 예정이다. 강영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3분기까지 도민 81%인 150만 명을 접종해 70% 이상 면역력을 조기 확보할 계획”이라며 “도민 모두가 하루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광주·전남 코로나 진정세 이틀간 지역감염 9명

광주와 전남지역 코로나 19 확산세가 누그러지고 있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9일 광주에서는 모두 4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3명은 기존 확진자와의 접촉자이고 1명은 해외 유입 사례다. 광주에서는 이날 신규 확진자 1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는 2854명이 됐다. 전남에서는 지난 9일 4명, 10일 오후 6시 현재 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누적 확진자는 1538명이 됐다. /김형호 기자 khh@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이달말까지 연장될 듯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곳곳에서 이어지면서 ‘아슬아슬한’ 국면이 계속되고 있다.

하루 확진자 수는 검사 건수에 따라 적게는 400명대, 많게는 700명대를 오르내리는 양상이다. 급격한 증가세도, 감소세도 없지만 수도권은 물론 비수도권에서도 다양한 일상 공간을 고리로 집단감염이 잇따르면서 언제 어디서든 확산세가 거세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최대 1400만명에게 백신을 한 차례 이상 접종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확산세를 최대한 억제하는 게 중요하다고 방역 수칙

준수를 연일 당부하고 있다. 정부는 아울러 다음 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도 막판 검토 중이다. 조정안은 11일 오전 발표된다.

7월부터 새 거리두기 개편안이 시행될 예정이어서 현행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와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이달 말까지 한 차례 더 연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거리두기 체계를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줄이는 내용의 개편안을 7월부터 적용하기로 이미 가닥을 잡은 만큼 ‘재연장’ 외에 다른 선택지가 별로 없는 상황이다. /연합뉴스

지분 부동산 삽니다
(주)오천. 010-3605-5000

단독심 삽니다. 010-6837-4700

나주 요양병원 「급매매」

토지면적 | 10,162㎡
건물면적 | 7,296㎡ (총 3동)
▶1동(2017년 준공) : 3,507㎡
- 지상 1층 ~ 지상 4층
- 베드 수 : 200베드
▶2동(2012년 준공) : 2,336㎡
- 지상 1층 ~ 지상 4층
- 현재 주간 요양 보호 30명
- 요양원 90명
- 추천용도 : 암 병동 또는 치매 병동
▶3동(2008년 준공) : 1,453㎡
- 지상 1층 ~ 지상 3층
- 현재 장례식장 운영 중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
매매가격 | 118억원
상담문의 | 010-3605-8564 (임선희)
나주시 우정로 56 리치타워 A동 101호
전남공인중개사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절대 선 수 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860-4700

상속합정승인공고

피상속인 : 김 김형수 (59123-XXXXXX)
피후수인 : 광주 북구 금호로19길 13-7, 302호 (윤양동)
상속인 김 김형수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재산승인을 광주시정무법원 목포지원 2021년 단정203호로 신청하여 2021년 6월 7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에 채권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1년 6월 11일
상속인 : 1. 조창준 (591123-XXXXXX)
광주 북구 금호로19길 13-7, 302호 (윤양동)
2. 김의현 (821211-XXXXXX)
광주 서구 내동로251번길 10, 103동 302호 (광충동, 광명하이츠타운)
3. 김성현 (840401-XXXXXX)
광주 북구 저북로 21, 105동 912호 (용봉동, 도아미래도아파트)
4. 김동진 (850802-XXXXXX)
광주 서구 금호로19길 27, 103동 501호 (광충동, 도아미래도아파트)

• 신고기간 : 2021. 6. 11. ~ 2021. 8. 20.
• 채권신고장소 : 상속인 1. 조창준의 주소.

산행안내

6월13일(일)
▲광주Kj산악회 6월13일(일) 경 남남해&금산두도계곡 산행, 염주체육관 07:00, 동아병원 07:05, 롯데백화점 07:10, 광주역 07:15, 문예후문 07:25, 비엔주차장 07:30
* 다음가게 광주Kj산악회 ☎ 010 7794 6920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9년 光州日報 光州日報

광고문의 (062) 227-9600 | 신문구독 (062) 220-0551 | 예약구독 (062) 220-0550